

한국경제의 변화기를 마주하며

이만우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1. 들어가며

2011년 미국의 경제수도라 할 수 있는 뉴욕에서 ‘아큐파이 월 스트리트’라는 시위가 발생했다. 미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퇴직금 잔치를 벌였던 월가 최고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분노로부터 시작된 시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와 국가를 넘나들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자신들이 전체 부의 50%를 장악하고 있는 최고부자 1%에 대한 나머지 99%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소득불평등의 완화와 분배개선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위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의 현재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 불평등 확대, 그리고 저성장기조 등의 문제점들을 노정하며 신음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의 후퇴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에 대한 맹신, 감세 및 탈규제, 세계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보편화되는 신자유주의 추세 하에서 경쟁력이 강한 기업의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몰락하였다. 제조업의 비용절감 노력은 인력축소로 이어져 고용효과가 약화되었고, 모자란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 등 비정규직의 확대는 고용시장의 이중구조를 확대시켰다. 세계화는 수출기업의 실적과 국내 고용 간의 괴리도 악화시켰다.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되어 갔고, 늘어난 실업은 소득분배의 악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거듭되는 금융위기 동안 소득격차는 점차 확대되었다. 금융위기는 경제에 심대한 충격을 미쳤다.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추세에서 떨어진 국가들의 성장률은 대체로 회복되지 않았고, 세계 경제

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렸다. 저성장은 가계 소득을 감소시키고 내수 기반을 축소함으로써 다시 저성장을 불러왔고, 결과 일자리는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다.

그동안 세계경제 질서로 각광받았던 신자유주의 경제는 저성장과 소득 분배의 악화라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가 더 이상 성장을 제고하지 못한다면, 사실 신자유주의 경제는 그 의미가 없다. 또다른 문제점인 양극화와 빈곤 역시 미래 경제성장의 근간을 부실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신자유주의의 종말, 나아가 자본주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마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단정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의 주류 경제철학으로 남아 있기 힘들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단적인 예로 지난 대선을 보라. 최대 이슈는 경쟁이 아닌 복지와 경제민주화 아니었는가?

3. 저성장에 대한 해답 모색 : 창조경제

저성장과 분배악화에 대한 문제가 이제 와서 새로이 제기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약해지고, 제조업의 고용창출이 줄어들에 따라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60년 이후 40년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 대기업, 제조업 위주의 정부 주도형 성장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새로운 성장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투입요소에 의한 기존의 경제 발전 모형으로부터, 생산성 향상 중심의 선진국형 발전 모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가 예측되는 우리로서는, 투입을 통한 성장을 제고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변화의 모색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차라리 생존의 문제에 가까웠다. 이렇게 투입 대신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은 결국 인적자본을 중요시하는 지식경제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성장과 고용을 끌어낼 수 있는 신성장동력 발굴사업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아직 용어나 개념에 있어 다소의 생소함과 모호성은 있으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 역시 이러한 연장선 하에 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 생산을 향상시키고, 산업간 생산성 향상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며, 이를 통해 산업간, 산업과 문화간의 활발한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었던 기존의 동반성장이나 신성장동력발굴사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MB정부는 2009년 3대산업군 17개사업의 신성장동력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첨단융합 산업이었다. 첨단융합산업은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

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가치 식품사업의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첨단 융합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산업군이기도 했다. 2012년 9월 산업연구원은 “신성장동력 정책의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이라는 용역과제를 총리실의 발주로 수행하였는데, 용역보고서에는 첨단융합산업은 IT융합시스템, 방송통신융합을 제외하고는 당초 기대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성장동력으로서의 향후 성장잠재력 등을 반영하는 설비투자, R&D투자, 고용 창출 등에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신성장동력 중 높은 성과를 보이는 IT융합시스템은 모두 현행 주력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어, 단기적으로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는 효과도 있으나 대기업 중심의 성과이며 산업생태계 조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ICT를 중심으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결코 실현하기 쉬운 약속이 아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식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투자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 정도가, 그렇지 않은 산업에 대한 투자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과의 연속성 하에서 추진전략을 설정하되, 기존의 실패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차별성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신속한 법적, 제도적 정비, 개인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지적재산권 시장의 완비 등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조차 하기 어렵다.

4. 양극화에 대한 해답 모색 : 경제민주화

경제 양극화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자본과 노동,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비제조업, 그 중에서도 IT산업과 비IT산업 간에 있어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임금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산업간, 노동요소간 부가가치의 차이 확대는,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 증대와 노동시장의 이원화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와 맞물리며 심각한 경제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용 철학의 다른 한 축은 경제민주화다. 현재 경제민주화 논란은 재벌 패리기에 급급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대기업이 가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서 나타난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많은 정책적 혜택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응당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기 때문이다. 우월한 지위에서 단가후려치기, 제 사람 심기, 인력 빼돌리기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기도 하였고, 압도적인 규모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이나 치킨, 동네빵집 같은 업종까지 무분별하게 사업영역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증여를 일삼기도 하였다. 그러

니 이러한 대기업패리기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경제민주화는 기업패리기가 아닌 경제주체가 각자 동등한 관계에 서자는 것 이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개념이 대두된 것은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논란의 귀결점도 소득 분배의 개선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써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있다. 특히 창조경제와 사회안전망의 관계는 보다 밀접하다. 첫째, 개인의 창의성을 증시한다는 맥락에서 창조경제는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과도 닮아 있다. 벤처라는 영단어를 우리말로 쓰면 모험이다. 여기에는 실패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창의적일 수 없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 번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특히 창조경제 하에 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도전도 쉬워질 것이며,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는 훌륭한 자산도 축적될 것이다. 둘째, 어떤 의미로든 새로운 경제로의 이행은 구조조정을 동반한다. 따라서 구조조정과정에서 밀려나는 경제주체들에 대한 배려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5.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창조경제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두 가치는 언뜻 보기에는 상반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둘은 상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절히 조화하는 것은 역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 동안 세계경제가 직면한, 그리고 우리 역시 예외일 수 없는 소득불평등과 저성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다. 그러한 노력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신성장동력과 동반성장, 혹은 빈곤완화적 성장(pro-poor growth) 등으로 일컬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경제 성장과 선순환되는 사회 복지 시스템의 강화에 핵심을 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신자유주의 경제의 보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볼 것인지의 성격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 질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 만큼은 너무도 명백하다.

6. 마치며 : 한국경제학회에 대한 당부

지금 우리 경제는 엄청난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결코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공황이 케인즈주의를, 스태그플레이션이 신자유주의를 새로

운 경제 질서로 채택하게 만들었듯, 작금의 경제위기도 머지않아 새로운 경제 질서의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향후 방향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격렬한 토론, 그리고 학계의 시의적절한 정책적 조언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명실상부한 대표적 학회인 한국경제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경제학회는 무려 60년 동안이나 순수학문으로서의 경제학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든든한 조언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년간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종신회원의 수도 많이 증가하였고, 가장 많은 학회가 참여한 공동학술대회도 개최하는 등 한국경제학회의 입장에서선 향후 도약의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한국경제학회의 사회적 책무도 그만큼 더 무거워졌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눈앞에 둔 바로 이 시점에 부질없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해 준, 한국경제학회 김인철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경제학회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며 짧은 글을 마치고자 한다.